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 나라예산 토론회



일정·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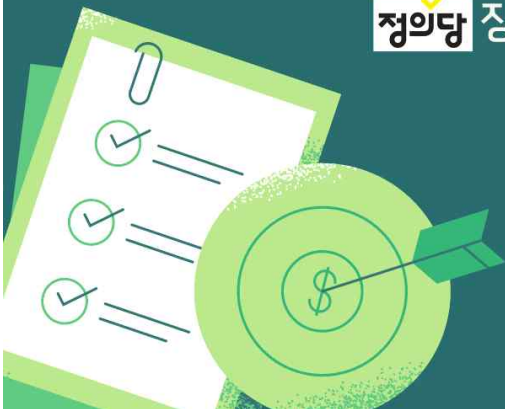
2022년 10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주영 윤건영 이수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목차

인사말_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인사말_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
인사말_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
인사말_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
인사말_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11
총론	13
기획재정위원회	19
국방위원회	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2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34
보건복지위원회	39
환경노동위원회	60
국토교통위원회	69
교육위원회	76

인사말 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서울 구로구을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먼저 「제10회 2023년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예산은 1년간의 나라 살림뿐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부담하고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 예산은 대체적으로 정부 관료 등 정책결정자의 의견만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감시가 존재해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 삭감 사업들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등의 예산은 삭감되는 반면 종부세 인하와 같이 부자감세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국가를 기반으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제목은 ‘시민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2023년 나라예산’입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나라가 실시하는 사업들의 실효성과 타당성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오늘 마련된 이 자리가 진정한 민생복지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경제 등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논의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2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년 나라예산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원만하게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예산은 시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찾아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에 진심어린 격려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토론회는尹 정부의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위기 등 공급망 차질, 그리고 기후변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가 일상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비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말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OECD 기준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율 독보적 1위,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에 살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는 또 다른 코로나 격차를 만들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가속하는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림자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부자감세 중단과 민생·복지예산 확충, 적극적인 취약·소외계층 보호, 선제적인 중소·영세·소상공인 지원,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기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尹 정부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상위 0.1%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는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불러올 것이 자명합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증세로 이어지거나 취약계층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아하니 둘 다일까 봐 걱정이 커집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재난 수준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정부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따져보면서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해가는 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년 나라예산 토론회> 개최를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3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나라예산 토론회>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
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윤건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간 정부 예산은 이를
편성한 몇몇 정부 관계자들과 해당 분야의 상임위원회 위원만 내용을 알 뿐, 시민들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예산 토론회>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전에, 시민사회의 눈으
로 정부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기후위기와 금융위기에 정부 예

산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서민의 삶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청와대 영빈관 이전과 같이 민생과 동떨어진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귀담아듣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필요한 민생예산을 늘리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4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년 나라예산!’ 토론회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문명 대전환기의 격랑 속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감염병 재난으로 악화된 불평등, 기후 변화로 인한 전세계적 재난 속에서 내년의 예산 편성이 시의적절한지 미래세대를 위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인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년 나라예산!’주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됩니다. 그러나 국민이 부담하고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 예산은 시민사회의 감시를 받지 않고 결정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순식간에 국가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리즈 트러스 총리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영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약속과 함께 집권 보수당의 당수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회에서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이에 영국중앙은행(BOE)은 자국 연기금의 파산을 막기 위해 수십억 파운드의 긴급 매입을 실시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IMF구제 금융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외환 위기로 인해 불평등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대한민국은 극도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고를 겪고 있습니다. 가계 빚은 1,800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불평등을 줄여나가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존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불평등을 타개할 민생 복지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었는지, 기후 위기 상황을 해결할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와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의 예산 삭감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인사말 5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년 나라예산> 토론회에 자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이전 정부와 달리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 기조로 선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복지, 주거, 보건, 에너지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적지 않은 예산 삭감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태껏 계속되어온 부자 감세 논란과 맞물려 정부의 공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 예산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일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지만, 실제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은 시민을 위해 설계되고 사용되어야 하지만, 정권 성향과 정책결정자의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비판받고 있는 이유 역시 정부가 예산 긴축의 영향권에 놓일 당사자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예산 삭감을 단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로 10회째 이어지고 있는 ‘나라예산토론회’는 국가 예

산이 공공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관점으로 국가 예산을 분석하고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나라예산토론회는 팬데믹 국면에서 악화된 불평등을 타개할 민생복지 예산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편성했는지 살펴보고, 시대를 역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삭감이 필요한 영역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자 여러분의 참여로 윤석열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의 허와 실을 제대로 진단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을 주최해주신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이학영, 이수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발표자, 그리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론

감세정책에 따른 실질적 수입 감소로 재정적으론 확장, 사회적으론 긴축예산 물가 인상과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른 법적의무 지출만 증대된 복지예산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지난 정부의 지나친 확장 재정 정책으로 긴축이 불가피하다?

지난 정부도 2017년(추경편성)과 2018년 모두 긴축재정을 했다. 결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은 17년(5.6%), 18년(6.8%) 모두 총수입 증가율(17년 7.2%, 18년 8.1%)보다 낮았다. 통합재정수지도 역대급 흑자를 달성했다. 일반정부 부채비율(D2) 및 재정충격지수도 모두 긴축이다.

구분	2017년	2018년	의미
총수입 증가율	7.2%	8.1%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총지출 증가율. 긴축적 성격
총지출 증가율	5.6%	6.8%	
통합재정수지	24조 원	31.2조 원	역사상 두 번째, 세 번째 흑자 규모. 긴축적 성격
일반정부 부채(D2)비율	40.1%	40.0%	2016년 말 이후 지속해서 하락. 긴축적 성격
재정충격지수	-0.22	-0.31	음수. 긴축적 성격

* 결산기준.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충격지수

2019년부터는 확장재정을 펼쳤다. 그리고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강요된 확장재정’을 펼쳤다. 다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재정 확장 규모는 가장 적은 규모 국가에 속한다.

2023년 정부안 총수입은 2.8% 증가하고, 총지출은 5.2%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 5.2%만 보면, 19년 이후 재정규모 확대 기조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까지 고려해 보면 긴축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총수입 증가보다는 총지출 증가가 훨씬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수입 증가율	1.7%	1.2%	19.2%	6.8%	2.8%
총지출 증가율	9.7%	9.3%	8.5%	8.3%	5.2%

* 총지출 증가율: 본예산 대비 예산안 증가율, 총수입 증가율: 결산(최종예산) 대비 증가율

재정적으로는 확장재정(재정 수입 대비), 사회적으로는 긴축 예산(사회적 수요 대비)

즉, 문재인 정부도 초기 긴축재정 이후 2019년도 이후 특히,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팬데믹이 강요한 확장재정을 펼쳤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규모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2차 추경으로 재정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2023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재정 지출을 거의 중단했다. 즉, 2023년도 총지출 증가율 둔화는 적극적 긴축 노력보다는 코로나19 일시적 지출 중단이 더 중요하다. 또한, 불과 2.8% 증가한 총수입 규모, 특히 1% 증대에 그친 국세 수입 규모를 고려 시 5.2% 증대를 '긴축재정'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올해 5%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국가의 실질적 재정 역할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2023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7% 증가한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 노인 및 공적연금 사업이다. 노인 및 공적연금 사업은 물가상승률과 노인인구 증가율을 고려해 보면, 10% 이상 늘어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물가상승률, 노인인구 증가율 등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 보면, 5.2% 총지출 증가 규모는 긴축으로 느껴진다. 즉, 사회적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사회적 긴축'이다.

결국, 2023년 예산안은 재정적으로는 확장(재정 수입 대비), 사회적으로는 긴축 예산(사회적 수요 대비)이다. 재정건전성 유지와 늘어나는 사회적 수요 사이에서 지출규모를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불과 1%만 증가하는 국세 수입액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를 하고자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지출 규모를 늘린 예산안이다.

그렇다면 왜 내년도 국세 수입은 불과 1%밖에 증가하지 않을까? 물론 1차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수입은 경기가 좋아도 증가하지만, 물가만 상승해도 증가하는 법이다. 물가는 상승에도 세수입은 정체되는 이유는?

내년 국세 수입이 16.6% 증가한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 실제로는 1% 증가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무려 16.6%(57.1조 원)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국세수입은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16.6% 증가
(’22년 본예산 343.4조원 → ’23안 400.5조원)

< 2023년 재정운용 모습 >

(단위 : 조원, %)

	’22년		’23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 총수입	553.6	609.1	625.9	72.4	13.1
· 국세수입	343.4	396.6	400.5	57.1	16.6
· 국세외수입	210.2	212.4	225.5	15.3	7.3
◇ 총지출	607.7	679.5	639.0	31.4	5.2
· 예 산	413.0	449.8	441.3	28.3	6.9
· 기 금	194.6	229.7	197.7	3.1	1.6

*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내년도 국세수입이 16.6% 증가한다고 밝힌 정부 보도자료

정부는 2022년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을 지나치게 과소 추계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때, 국세 수입 규모를 343조 원에서 397조 원으로 수정했다. 그런데 사과까지 하고 수정한 이후 수정 전, 과소 추산한 본예산 국세 수입 규모 대비로는 16.6% 증대한다고 보도자료에서 주장했다. 그리고 내년도 국세 수입 증대는 “주요 세목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정부의 노력 때문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본예산 대비 50%에서 49.8%로 0.2%p감소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추경 기준 49.7%에서 0.1% 증가했다고 표현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면 국세수입도 증가한다. 국세 수입이 물가상승률에 크게 모자라는 1% 상승에 그치는 이유는 감세에 따른 결과다.

정부 감세 규모는 5년간 -13조 원이 아니라 5년간 -60조 원 이상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5년간 60조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감세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했기 때문에 감세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2017년 소위 ‘핀셋 증세’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세 조치를 취했다. 결국 17년 핀셋 증세 효과는 현재는 거의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되돌리는 감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된 새로운 감세라는 의미다.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5년간 세수 효과는 -13조 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보다 향후 5년간 감소되는 세수는 13조 원이 아니라 60조 원이다. 정부는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으로 세수효과를 발표하나 올해보다 향후 5년간 감소하는 금액은 60조 원이다.

단위: 조원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60.2	-6.4	-13.7	-13.7	-13.2	-13.2
소득세	-15.7	-3.5	-4	-3.2	-2.5	-2.5
법인세	-27.9	-0.6	-7	-6.7	-6.8	-6.8
증권거래세	-7.4	-0.7	-0.8	-1.9	-2	-2
종합부동산세	-8.1	-1.3	-1.7	-1.7	-1.7	-1.7
기타	-1.1	-0.3	-0.2	-0.2	-0.2	-0.2

* 이상민(2022), 2022년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세수효과
2022년도 보다 실제로 5년간 줄어드는 세수금액. 기준년대비(누적법)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인 ‘순액법’으로 감세 규모를 발표하면 안 된다. 즉, 내년도 국세 수입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소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이다. 정부의 감세 조치에 따라 향후 5년간 60조 원, 2023년도만 6.4조 원 세수가 줄어든다.

재정의 트릴레마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내년도 재정 규모를 보면 두 가지 딜레마 상황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물가가 5% 이상 상승하고 사회적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 또한, 국세 수입이 불과 1%만 상승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두 요구는 상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딱 물가상승률 정도만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이쪽으로 떨어지면 사회적 재정수요를 감내할 수 없고, 저쪽으로 떨어지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위험한 줄타기’다.

그러나 재정은 (이중 모순인) 딜레마가 아니다. (삼중모순을 뜻하는) 트릴레마로 이해해야 한다. 재정의 트릴레마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부채를 줄이면서 감세할 수 없다는 삼중 모순을 뜻한다. 2023년 재정 규모 산출이 ‘위험한 줄타기’에 내몰린 이유는 감세라는 정책이 상수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5년간 60조 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상수인 처지에서는 어느 누구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물가 인상 및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 재정 규모 확대, 국채 감소, 조세부담 감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정의 트릴레마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사회복지 증액의 이유는 물가상승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법적의무지출 증가

2023년 예산안은 2022년보다 3,616개 사업이 감액되고 4,281개 사업이 증액되었음. 감액된 세부사업의 총 감액규모는 51.6조 원임. 또한, 증액된 세부사업은 총 83조 원임. 즉, 51.6조 원의 감액사업과 증액된 83조 원의 사업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단위: 백만원	22년 본예산	23년 예산안	감액된 세부사업액	증액된 세부사업액
총합계	607,663,263	639,041,903	-51,592,793	82,971,433
사회복지 분야	194,953,267	205,836,401	-13,208,346	24,091,48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1,327,003	25,703,773	-7,632,557	2,009,327
교통 및 물류 분야	22,848,881	20,867,800	-5,861,533	3,880,452
국방 분야	53,018,935	55,436,553	-5,599,417	8,017,035
일반-지방행정 분야	98,093,856	111,713,507	-4,158,214	17,777,865
보건 분야	22,712,563	20,733,600	-3,767,175	1,788,212

* 이상민(2022), 2023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의 모든 것

복지 분야 감액 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부문별로 파악해보면, 고용 부문과 주택 부문은 각각 -2.3조 원, -2.4조 원 순감액되었다. 반면, 공적연금 부문, 노인 부문, 기초생활보장 부문, 노동 부문은 각각 8.3조 원, 2.7조 원, 2.4조 원, 0.7조 원 순증 되었다.

공적연금 부문, 노인 부문, 기초생활보장 부문 사업은 대부분 법적의무지출이다. 노인인구가 5.7%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여 공적연금, 노인 부문의 법적의무지출 금액이 증대되었다. 또한,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을 자동으로 늘리게 되었다. 또한, 노동 부문 전체 증감액 7,436억 원 중, 6,460억 원이 산재보험급여 증액이다. 결국, 법적의무지출 사업 위주인 사회복지 부문 사업은 증가되고 법적의무지출 사업이 아닌 부분은 감소되었다. 다만, 법적의무지출이 아닌 장애인 이동권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 관련 사업은 법적의무지출이 아니나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복지분야 부문별	22년 본예산	23년 예산안	감액된 세부사업액	증액된 세부사업액	차액	증감률
고용	25,938,300	23,613,660	-3,627,515	1,302,875	-2,324,640	-9.0%
고용노동일반	604,495	634,045	-11,100	40,650	29,550	4.9%
공적연금	63,009,558	71,323,568	-595,788	8,909,798	8,314,010	13.2%
기초생활보장	16,763,782	19,135,491	-2,878	2,374,587	2,371,709	14.1%
노동	10,073,550	10,787,566	-151,354	865,370	714,016	7.1%
노인	20,459,160	23,114,318	-570,949	3,226,107	2,655,158	13.0%
보훈	5,930,835	6,218,159	-39,581	326,905	287,324	4.8%
사회복지일반	947,295	1,010,289	-383,852	446,846	62,994	6.6%
아동·보육	9,182,730	9,821,844	-1,003,305	1,642,419	639,114	7.0%
여성가족청소년	1,428,872	1,512,975	-180,009	264,112	84,103	5.9%
주택	35,826,273	33,460,004	-6,330,761	3,964,492	-2,366,269	-6.6%
취약계층지원	4,788,417	5,204,482	-311,254	727,319	416,065	8.7%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많이 감액된 이유는 고용 부문과 주택 부문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인데 특히, 고용창출 프로그램, 임대주택 프로그램 위주 사업 감소가 가장 중요한 이유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많이 감소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이 삭감된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많은 사업이 감액된 목은 자치단체이전 목, 민간이전 목, 융자금 목이다. 자치단체이전 목이 감소된 이유는 종부세 감세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삭감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일

반회계 등으로 지출하던 사업을 균특회계로 이전한 부분도 다수 있다. 민간이전 목이 감소된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삭감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 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크다.

융자금 지출은 우리나라 총지출 규모를 왜곡하여 통계착시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융자금 전액을 총지출 규모에 계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융자금 증감액과 이차보전 증감액을 동시에 파악해야 전체 총지출 규모의 경제적 실질의미를 파악 가능하다. 이에 융자금 목 금액은 총 4.8조 원이 감소된 반면,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5,749억 원이 증액되었다. 즉, 경제적 실질은 지출이 증가되었으나 총지출 규모는 4조 원 이상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한다. 그만큼 재정 규모가 작게 보이는만큼 재정준칙을 더 손쉽게 지키는 것처럼 나타나게 됨.

재정의 트릴레마 국민 동의를 통해 풀어야.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국민 동의 없이

재정의 트릴레마를 모두 해결할 수는 묘책은 없다. 재정규모 확대, 국채 감소, 조세부담 감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 세 가지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를 조금 희생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는 국민의 동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예산은 정치다. 정치적 합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동의를 위한 전제 조건은 투명한 정보 공개다. 정확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국민적 동의가 빠진 예산이다. 국민의 동의가 빠진 예산은 예산이 아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기재부 세제실	삭감	종교인과세법 정비	종교투명성센터	20
기재부 및 각 부처	증액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인건비 증액	공공운수노조	21
기재부 및 각 부처	증액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차별 해소 예산 편성	공공운수노조	22
기재부 기후대응기금	삭감	(산업부) 기후변화협약대응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23
기재부 기후대응기금	삭감	(해수부) 선박온실가스감축지원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24
기재부 기후대응기금	삭감	(산림청, 환경부) 탄소흡수원 조성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25
기재부 기후대응기금	증액	(환경부) 재생에너지그린수소전환사업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26
기재부 기후대응기금	삭감	(환경부) 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27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종교인과세법정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예산안	1,878	1,654	1,654	1,577	1,577

■ 문제점

- 최근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를 볼 경우, 2020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은 0.7%로써 일반적인 근로자 실효세율인 5.9%에 한참 미달한 상황임.
- 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일거라고 가정하더라도 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고소득 종교인이 다수임을 감안한다면 일반근로자에 비해 과도하게 혜택이 큰 상황임.
- 종교인 기타소득자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만 강의료, 원고료 등을 받은 일반 기타소득자들은 근로장려금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성의 문제도 있음.
- 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한 해외 종교인과세사례를 보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은 근로소득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종교인과세법은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특혜임.
- 현행 종교인과세법은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선택과세를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소득세법리 및 판례와 모순되는 상황임.
- 엄연한 조세지출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사후관리해야 하나, 현행 종교인과세법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견 : 종교인과세법 폐지

-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할 것.
- 이 법이 폐지되어도 현행법상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세가 가능함.

■ 담당 단체 : 종교투명성센터 (02-6927-2503)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질 임금 삭감 방지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일반회계 및 기금

■ 현황

- 관련예산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 임금 관련 예산

대상	해당 사업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임금	기본경비·사업비 포함된 상용임금목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용역(자회사 포함) 임금	공공기관 출연, 보조 예산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기간제·용역·위탁 임금	자치단체 보조 예산

■ 문제점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70%가 넘는 숫자가 최저임금~최저임금 1.5배 수준(정액급여 기준)의 저임금 상태임.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등의 절반 수준이고 민간 상용직(100인 이상)의 70% 수준에 불과함.
- 저임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1~2022년 인건비 인상은 소비자물가상승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이 삭감되었음. 2023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1.7~2.2% 수준으로 2021~2023년 동안 6~7.4%의 실질임금 삭감이 발생 예상.

항목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인건비 인상률	상용임금	1.4%	1.8%	2.2%	5.4%
	그외	0.9%	1.4%	1.7%	4%
소비자물가상승률	2.5%	5.2%(추정)	3.7%(추정)	11.4%	

*22,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경제전망(2022.8월) 자료

- 공무직위원회 논의 결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 한해 공무원에 비해 2021/2023년 0.5%, 2022년 0.4%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실질임금 삭감을 방지하기에도, 정규직과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그마저도 출연금·보조금 등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공공기관, 지자체 공무직 등은 제외.
-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처우개선 명목으로 신설된 식대, 명절상여금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일부만 인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의견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23년 인건비 증액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상용임금, 출연금, 보조금 명목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공무직, 기간제, 민간위탁 노동자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 관련 예산 일체
- 인상 수준 : 지난 3년간 발생한 실질임금 삭감을 방지하는 수준의 인건비 인상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kptu2011@gmail.com)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질 임금 삭감 방지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일반회계 및 기금

■ 현황

- 관련예산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 임금 관련 예산.

대상	해당 사업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임금	기본경비·사업비 포함된 상용임금목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용역(자회사 포함) 임금	공공기관 출연, 보조 예산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기간제·용역·위탁 임금	자치단체 보조 예산

■ 문제점

- 직무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전체 노동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수당의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지급해야 함에도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수당 차별은 심각한 상황임.

복리후생 관련 대표 3종 수당

항목	공무원 기준	무기계약직 기준
명절휴가비	월봉급액 60%, 연2회(9급 입사자 기준 연200~600만원)	연 100만 원
복지포인트	기본 40만 원, 근속 1-30만 원, 배우자 10만 원, 직계 존·비속 등 1인당 5만 원 등	연 50만 원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 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자녀 100,000원, 배우자·자녀외 가족 20,000원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 하지만 2022년에 명절상여금 20만 원, 복지포인트 10만 원을 인상한데 이어, 2023년에는 명절상여금만 10만 원만 인상하는 등 미흡한 조치만 반복되고 있음.

■ 의견 : 공무원/정규직과 복지 차별 해소 예산 편성 : 약 2,000억 원 증액

-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공무원 동일 기준으로 편성.

* 명절상여금을 10만명 기준 기본급 120%로 지급할 경우, 약 1900억 원 예상 : 10만명 × (302만 원(공무직평균임금)×80%(기본급비율)×120%-100만 원(현재 상여금)) = 189,920백만 원.

* 복지포인트 10만명 기준 근속(5년), 자녀 수당(5만원) 추가 : 10만명 × 10만 원 = 10,000백만 원.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kptu2011@gmail.com)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기후변화협약대응(6131-302)(산업부)

■ 현황

- 산업부의 기후변화협약대응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확산 사업.
- 사업내용: 해당 사업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발전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연구회 운영, 산업계 탄소 중립 컨퍼런스, 정책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것임.
- 해당 사업 예산 총액 변동 : ('22) 1,034백만원 → ('23) 1,778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업종별 우수사례 발굴·공유·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 688백만원 ○ 산출 : (688백만원) 15개 업종×45.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 688백만원 ○ 산출 : (688백만원) 15개 업종×45.8백만원
기후변화대응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 100백만원 ○ 산출 : (100백만원) 포럼 10회×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 100백만원 ○ 산출 : (100백만원) 포럼 10회×10백만원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 246백만원 ○ 산출 : (246백만원) 컨퍼런스 1회×24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 990백만원 ○ 요구 : 부산 엑스포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 추진 예산 요구 ○ 산출 : (990백만원) 컨퍼런스 1회×990백만원

■ 문제점

- 해당 사업의 2022년 예산은 1,034백만 원에서 2023년 1,778백만 원으로 약 72% 증액되었음. 급격히 증가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업종별 우수사례 발굴·공유·확산', '기후변화대응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 3개의 사업 중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만 금액이 증가함.
-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증가한 이유는 부산 엑스포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 추진 예산 요구로 인한 것으로, 2022년 컨퍼런스 1회 책정 비용 246백만 원이 2023년에는 990백만 원으로 증액되었음.
- 부산 엑스포 '2030 세계박람회'의 경우 부제는 세 가지로 ①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② 인류를 위한 기술(Technology for Humanity), ③ 돌봄과 나눔의 장(Platform for Caring & Sharing)이나 직접적으로 기후변화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지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의견 : 기후변화협약 대응 지원사업 재검토 후 예산 삭감

-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예산 편성 적절성 재검토 후 예산 삭감해야.

■ 담당 단체 :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geykkorea@gmail.com)

아직도 집행률 0.1%인 사업? 실효성 원점 재검토 필요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선박온실가스감축지원(6131-750)(해수부)

■ 현황

- 해당 사업은 국내 중소 선박사에게 엔진출력 제한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며, 온실가스 감축 및 운항비용을 절감하여 국내 해운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임.
- 국제해사기구(ICS)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현존선에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하여, '23.1.1 규제시행 이후 허용값을 충족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 대상 설치비 지원 사업임.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계획		2023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선박온실가스 감축지원	-	2,565	2,565	2,905	2,449	△456	△17.8

■ 문제점

- 2022년도 예산 편성액은 2,526백만원이나 예산안 제출 시점 기준으로 2백만원만 집행함
- 해당연도가 끝나지 않았으나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0.1%만을 집행한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나 적절성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19	-	-	-	-	-	-	-	-	-	-
2020	-	-	-	-	-	-	-	-	-	-
2021	-	-	-	-	-	-	-	-	-	-
2022	2,565	-	2,565	-	2,565	2	0.1	0.1	-	-

■ 의견 : 집행률 0.1%인 사업의 실효성 재검토 후 예산 삭감

-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사업 방향은 적절하나 2022년 회계연도 시작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이 지났음에도 예산 총액의 0.1%만 집행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사업의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실제 업장과 업체에서 원하는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 후 예산 삭감해야.

■ 담당 단체 :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geykkorea@gmail.com)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탄소 흡수·저감 할 수 있어야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탄소흡수원조성(6133)(산림청, 환경부)

■ 현황

- 탄소흡수원 조성 관련 7개 사업. (전체 사업 158개, 사업비 총액 중 11.6% 차지)
- 탄소흡수원 조성 사업으로는 산림탄소흡수원복원, 산림탄소통계데이터 MRV관리체계, 탄소중립도시숲조성, 생태계기후대응 통합관리체계구축, 도시생태축복원사업, 국립공원 탄소흡수원구축, 습지보전관리가 있음.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1 결산	2022계획액		2023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
탄소흡수원조성	(273,408)	341,852	341,852	296,227	282,247	△59,605	△17.4

■ 문제점

- ‘탄소흡수원조성’ 구분 하에는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이 세분화되어 신설 또는 시행되고 있음. 이에 사업 예산 집행 및 유관 부서의 소통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 기후대응기금으로 산정된 예산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어야 하기에 ‘탄소흡수원 조성’ 구분 하에 시행되는 사업들은 탄소 저감·흡수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사업의 탄소저감·흡수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부재한 사업들이 존재함.
- ‘산림탄소통계데이터MRV관리체계’ 사업의 경우, 사업의 향후 기대효과를 탄소흡수량 추가 인정으로 제시하고 있음. 본 사업은 흡수량 산정 방법의 개선을 통해 흡수량 수치 증가를 꾀하는 것으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탄소흡수원 및 흡수량 증대는 이뤄지지 않음.

■ 의견 :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삭감, 해당 부처 소관으로 이전

- ‘탄소흡수원조성’ 구분 하의 사업들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기후대응기금 예산안에서 제외해야 함. 일례로, 탄소중립도시숲 조성의 하위사업인 ‘시민정원사 육성’ 사업은 산림청 소관 예산으로 편성함이 바람직함.
- 특히, MRV관리체계 사업에서 탄소흡수량의 회계상 수치 증가를 사업의 기대효과로 제시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기후위기의 영향을 예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담당 단체 :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geykkorea@gmail.com)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은 대폭 감축? 투자 확대 필요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6233-401)(환경부)

■ **현황**

- 환경부 환경기초시설인 소수력 등을 활용한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설비 설치 지원 사업임.
- 2022년도 3,080백만원에서 2023년 260백만원으로 줄었으나, 이는 사업별 진행 단계에 따른 것으로 해당 사업들은 기본구상과 설계용역을 하는 시기임.
- 한편,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수전해 설비규모가 '30년까지 850GW, '50년까지 3,600GW로 확대되는 등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출처: 국내 최초 10MW급 이상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20929).
- *글로벌 수전해 누적 투자규모(IEA 자료 활용 추산) (억불) : (~'30) 2,200, (~'50) 7,200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8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080백만원 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생산시설 설치 3,080백만원	260 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260백만원 가. 총주2수력 활용 그린수소 전환 : 90백만원 - 3MW급 수전해 시설 기본구상 용역 1식 × 90백만원 = 90백만원 나. 밀양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전환 : 170백만원 - 0.7MW급 수전해 시설 구축 설계용역 1식 × 170백만원 = 170백만원

■ **문제점**

-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항목에 따르면 '22~'26 동안 연간 260백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이는, 현재와 같이 실증사업을 구상만 하겠다는 것으로 실제 사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설 이외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수전해 설비 실증 및 설치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 원)

중기 재정계획	'21	'22	'23	'24	'25	'26
'21~'25	-	4,400	4,609	5,153	5,897	
'22~'26		3,080	260	260	260	260

■ **의견 : 미래 산업경쟁력인 수전해 설비 투자를 위한 사업 재검토 후 증액**

-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실증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중기 재정계획을 재검토 후 증액해야.
- 산업부에서 수전해 설비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도 실증 사업을 추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 **담당 단체 :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geykkorea@gmail.com)**

집행률 낮은 사업 및 탄소배출 체험관 사업 재검토 필요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6331-301)(환경부)

■ 현황

- 해당 사업은 아래 두 사업을 포함하여 기후위기적응대책, 기후변화취약계층·지역 지원, 온실가스줄이기 홍보,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등을 다루고 있음

1.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 지원, 탄소중립 이행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등
2. 탄소중립 체험관: 2050 탄소중립 필요성을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 조성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1			2022(7월 말)						2023 기획안
	계획 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당초				수정	계획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3,430	3,430	3,340 (1,572)	9,500	9,500	9,500	9,400 (1,438)	9,500	9,400 (1438)	12,981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2,930	2,930	2,930 (1,505)	8,000	8,000	8,000	8,000 (1,438)	8,000	8,000 (1438)	12,120
탄소중립 체험관	-	-	-	1,670	1,670	1,670	-	1,670	-	4,500

■ 문제점

- 지자체 탄소 중립 지원사업은 2021년은 45.8%, 2022년 7월까지 15.3%로 집행률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36.6%를 증액한 12,981백만원을 편성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예산이 실집행비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은 오히려 전체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의 예산 배분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 탄소중립 체험관 사업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탄소 배출 사업이므로 기존 건물을 재활용한 사업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탄소 감축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

■ 의견 : 탄소중립 지원사업 집행률 및 탄소배출 체험관 재검토 후 예산 삭감

-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실집행률 저조 원인 분석 및 대안 마련 필요.
- 합리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절성 재검토 후 예산 삭감해야.
- 탄소배출을 늘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배출량과 당위성 신중히 검토 필요.
- 탄소중립 필요성 교육 시설의 목적에 맞게 신축 건물 확대가 아닌 다른 방향성 제시해야.

■ 담당 단체 :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geykkorea@gmail.com)

국방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국방부 방위사업청	삭감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9
국방위원회	증액	개인용품	나라살림연구소	31

선제 타격 뒷받침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한국형 3축 체계

■ 현황

-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북핵·미사일 작전 체계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응징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으로 구성됨.
- 2023년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패트리엇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230mm급 다련장 등 총 48개로 약 5조 2,549억 원이 책정됨. 전년 대비 5,899억 원, 12.6% 증가한 수치임.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한국형 3축 체계 ¹⁾	-	4,665,000	-	5,254,900	-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2023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6% 증가한 57.1조 원>, 2022.08.30.

■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 ‘핵·WMD 대응 체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의 이름을 다시 ‘한국형 3축 체계’로 변경하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 한편 한국과 미국, 북한의 군사훈련이 이어지며 강대강 대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군사적 긴장은 매우 높아져 있음.
-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선제 타격, 지도부 참수작전 등이 포함된 한미연합사 작전 계획 5015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뒷받침하는 사업임. 북한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시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개념인 킬 체인은 선제 공격이나 예방적 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 개념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국방부가 주장하는 킬 체인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도발 징후 포착 30분 이내 탐지-식별-결심-타격을 위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구축하여 신속하게 운용해야 함. 그러나 선제 타격을 결정할만큼 완벽한 탐지가 쉽지 않으며 탄도미사일 북한의 움직임이 ‘임박한 공격 징후인지’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한 계획임. 막대한 군사비 투자에 비해 기술적으로 성취하기는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짐.

1)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매년 사업 목록에 차이가 있으나 국방부는 관련 사업 목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총 48개로 5조 2,549억 원을 책정함

- 선제 공격론이 야기할 안보 딜레마의 격화 역시 중대한 문제임. 한국과 미국이 선제 타격 등이 포함된 작전계획을 연습하고 전술핵 투하도 가능한 F-35 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수시로 전개하자, 북한이 지휘부 공격 시 자동 핵 타격, 핵 선제공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핵무력 법령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또한 북한은 킬체인과 KAMD 등에 맞서 이동식 발사대, 달리는 기차, 저수지 SLBM 발사 등 미사일 발사 수단과 방식을 다양화하여 정찰과 감시를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KN-23, KN-24와 같이 저고도 변칙 비행이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도 지속하고 있음. 북한의 미사일이 다양화, 고도화되는 가운데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은 결국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국가 예산을 생각할 때 과잉 투자가 될 수밖에 없음.
- 한반도 핵 갈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음. 남한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가 넘는 금액을 국방비로만 지출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게 된 것은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였음. 결국 상호 위협 감소,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은 불가능할 것임.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북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대화를 어렵게 만들어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의견 :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예산 삭감

-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 등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삭감해야 함.

■ 담당 단체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사병 치약·칫솔 단가조정으로 40억 원의 절감을?

국방부, 일반회계, 개인용품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개인용품	71,957	72,550	72,550	68,815	68,815

- 사업내용: 개인 위생여건 보장을 위한 전 장병 대상 개인 일용품 지원

■ 문제점

- 장병의 개인 위생을 위한 일용품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가 전년대비 5.1% 감액됨.
- 하지만 현금지급 대상 장병은 2022년 310,094명에서 2023년 312,851명으로 증가했으나 지원 현금액은 11,550원으로 동결.
- 또한 치약·칫솔 등 현금지급 물품의 구매액도 296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약 41억 원 감소.
- 지급 대상 장병 증가와 함께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41억원 이상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 가능.

2023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백만 원)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2,550	○ 일반수용비(210-01) : 72,550,000천원 가. 일용품 · 현금지급 : 310,094명×11,550원=42,979,028천원 · 치약, 칫솔 등 현금지급 : 29,570,972천원	68,815	○ 일반수용비(210-01) : 68,815,000천원 가. 일용품 · 현금지급 : 312,851명×11,550원=43,361,149천원 · 치약, 칫솔 등 현금지급 : 25,453,851천원

■ 의견 : 증액

- 국방부는 단가 조정 등을 통해 치약 147백만 원, 칫솔 88백만 원 등 지급 현금에 대해 감액 가능하다는 의견임.
- 2023년 예상되는 대외경제 환경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단가 인하가 사실상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됨.

■ 담당 단체 :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문화체육 관광부	삭감	종교문화시설건립	종교투명성센터	33

2배 넘게 폭증한 종교문화시설건립 지출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종교문화시설건립

■ 현황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종교문화시설건립	10,967	9,160	9,160	24,801	20,496

■ 문제점

- 종교문화시설건립예산이 2022년 대비 2.24배로, 2021년 대비 1.87배 폭증한 상황.
- 대부분의 시설이 사찰 등의 경내에 위치하거나 경당 등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해당 종교에서만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어서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일반 국민들의 이용이 저조하며, 특정 종교만을 위한 시설로 전략한 전례가 많음.
- 불교는 전통문화체험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경내에 시설을 설립한 뒤 사실상 독점 사용하고 최근에는 시설건립을 넘어서서 신안의 경우처럼 가톨릭의 사례를 좇아 불교식의 순례길 조성에 나서고 있음.
- 가톨릭은 순교자가 나온 모든 공간을 독점적으로 성역화하여 전국을 순례코스화 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서소문, 광화문, 천진암 등의 경우처럼 다른 역사를 인위적으로 삭제하거나 재구성하는 가해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음.
- 개신교는 목포, 군산 등 각 지역마다 곳곳에 개신교 선교와 근대화의 전파라는 주제 하에 근대문화유산물을 개신교적 시각에서 전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종무실은 각 종교계의 시설건립 민원을 개별적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각종 교별 대화나 종교공통의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검증하는 노력은 안 하고 있어 사실상 종무실은 예산의 종교전쟁의 장으로 변질된 상태임.

■ 의견 :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삭감하고, 지출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할 것

-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하여 동결할 것.
- 모자라는 개별 사업비는 시설의 배타성을 감안하여 개별 종교가 충당할 것.
- 해당 지역의 종교적 다양성을 아울러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할 지출기준을 공개적으로 마련할 것.

■ 담당 단체 : 종교투명성센터 (02-6927-2503)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식품의약품 안전처	증액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환경운동연합	35
해양수산부	증액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환경운동연합	36
해양수산부	증액	해양보호구역 관리	환경운동연합	37
해양수산부	삭감	용융염원자로 혁신기술개발 연구사업	환경운동연합	38

녹조 독소로부터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1231-301)

■ 현황

(단위:백만 원)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7,125	7,998	7,729	6,278	6,278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등 조사	801	730			730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812	812			812

- 사업내용: 축수산물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물질 등 검사·조사 사업의 위탁운영비 지원

■ 문제점

-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812백만 원 수준으로 위해우려 수산물 수거 감사를 직접 수행하는데 231백만 원, 위해 우려 수산물 수거검사를 위한 국고보조에 501백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 수준임.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자자체의 역할이 중요함. 유통농수산물 전체 수거검사 건수 중 자자체의 검사 건수가 최근 5년간 87.5%를 차지함. 조류독소의 농수산물 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위해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방식약청과 자자체를 대상으로 수거검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 있음.
-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등 조사를 위한 예산은 730백만 원 수준으로 수산물 452백만 원, 농산물 278백만 원으로 주로 검사수수료와 검체구입비임. 최근 시민단체를 통해 녹조 독소가 쌀, 무, 배추, 옥수수, 고추 등 농산물과 빠가사리, 메기, 붕어즙 등 수산물에 축적됨이 확인됨. 식약처에서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우려농수산물을 수거검사하고 회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의견 : 증액

■ 담당 단체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매년 천마리 넘는 고래류 혼획 폐사, 혼획 저감 어구 보급 예산 책정해야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구축(3150-343)

■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구축	2,745	1,802	1,802	3,482	3,482

- 사업내용 : 연근해어업의 대상자원, 어선, 어구 및 제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

■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평균 1,000여 마리 이상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폐사함.
- 특히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상괭이의 혼획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고래류가 탈출할 수 있는 혼획 저감 어구를 개발·보급했지만, 예산은 2021년 이후로 책정되지 않음.
- 어업 현장에서는 혼획 저감 어구의 높은 비용과 어획 손실률에 대한 우려로 어구의 사용을 저조함.

■ 의견 : 예산 편성

-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동등성 평가 등 국제현안과 맞물려 국내 해양포유류보호를 위한 예산 책정과 계획이 필요함.
- 2021년 보급 예산과 동등한 수준의 예산 반영 필요함 (809백만 원).

■ 담당 단체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확대 계획 필요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해양보호구역 관리(해양환경보전, 1031-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
해양보호구역 관리	5,549	11,420	11,420	15,729	15,093

- 사업내용: 해양보호구역 자율형 관리체계 구축·관리 및 대시민 인식증진 등

■ 문제점

- 우리나라는 나고야 협약 비준국으로 2020년까지 관할수역 대비 1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로 함. 그러나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준 2.46%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국제협약에 대한 이행수준이 낮은 수준임.
-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최소 30~50%의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 과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임.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G20) 등에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는 선언을 하였음.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영해기선 2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지만, 영해기선 20%는 관할수역의 약 5%임.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평가 역시 필요함.

■ 의견 : 예산 편성

-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개별적 로드맵과 예산 편성이 필요함.
-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보다 강한 행위 제한이 포함되어 인간 간섭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음.
- 우리나라 영해에 포함되는 도서는 총 2,918개로 이 중 140개의 절대보전 도서와 550개의 준보전 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필요함.
- 무인도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제한이 적어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이 가능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범위를 넓혀 지정할 수 있어 실태조사 예산 편성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 요구안 중 삭감된 예산을 무인도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실태조사 용역으로 편성 필요함.
- 해양보호구역 평가관리에 대한 계획 및 예산 마련 필요함.

■ 담당 단체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바다까지 퍼지는 방사능 위험 개발 사업 전액 삭감

해양수산부, 용융염원자로(MSR)혁신기술개발(R&D) (2046-342)

■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1년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
용융염원자로(MSR) 혁신기술개발	2,745	1,802	1,802	3,482	3,482

- 사업내용: 부유식 소형 핵 발전소에 대한 개발 연구사업

■ 문제점

- 후쿠시마 사고를 통한 방사능 원자로 이용의 폐해가 더욱 드러남.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해양수산부에선 해양방사능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탐지와 예측 기술을 개발에 관한 신규 연구 진행 중임.
- 반면 바다에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사업 예산을 신규 포함한 건 모순적 발상임.

■ 의견 : 전액 삭감

■ 담당 단체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보건복지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보건복지부	증액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공운수노조	40
보건복지부	증액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공공운수노조	41
보건복지부	증액	국민연금기금전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확대)	공공운수노조	42
보건복지부	증액 및 신설	국민연금기금전출 (출산 크레딧 급여)	공공운수노조	43
보건복지부	증액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공공운수노조	44
보건복지부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공공운수노조	45
보건복지부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공공운수노조	46
보건복지부	증액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확충	참여연대	47
보건복지부	증액	노인보호전문기관	참여연대	49
보건복지부	증액	노인요양시설 확충	참여연대	50
보건복지부	증액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의료단체연합	51
보건복지부	증액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보건의료단체연합	53
보건복지부	삭감	의료 마이데이터,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중단	보건의료단체연합	55
보건복지부	삭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운영	나라살림연구소	56
식품의약품안전처	증액	인허가 심사지원 증액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57
식품의약품안전처	삭감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58
보건복지부	증액	모자보건사업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59

국제 기준 상병수당 신속 도입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4931-309)

■ 현황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10,990	10,990	23,307	20,433

- 사업내용 : 2022년부터 실시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예산.

■ 문제점

- 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임. 현 정부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음.
- 2022년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나, ① 보장 수준이 최저임금의 60%로 낮고 보장기간도 최대 4개월로 너무 짧아 국제 최저 기준에 못 미치고, ② 6개 기초단체에서만 시행되어 대상이 제한적임.

<ILO 상병급여협약(제130호) 상병급여권고(제134호)와 시범사업 모델 비교>

항목	ILO 기준	시범사업 모델
수급요건	- (130호) 개별국가에 위임 - (134호) 대기기간 폐지	- 모형1 : 7일 / 모형2 : 14일 / 모형3 : 3일
급여기간	- (130호) 모든 기간 원칙, 최저 52주 이상 - (134호) 모든 기간	- 모형1, 모형3 : 90일 / 모형2 : 120일
급여수준	- (130호) 이전 소득의 60% 이상 - (134호) 이전 소득의 66.7% 이상	- 일 43,960원(최저임금 60%)

- 7월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기에는 보상수준이 너무 낮아 신청자 수가 극히 저조함. 신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범사업 실시 필요. 제대로 된 시범사업 설계를 통해 신속한 제도 도입을 위한 실질적 검증과 준비를 해야 함.

■ 의견 : 국제 기준에 맞는 시범사업 위한 10,217백만 원 증액

- 급여수준을 최저임금이 아닌 실제 소득의 최소 60% 이상 보장 필요.
- 2021년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273.4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약 1.5배 수준. 현 예산 20,433백만 원의 0.5배인 10,217백만 원 증액 필요.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008-206)

■ 현황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	26,525	26,525	66,202	38,214

- 사업내용 : 지역 납부재개자에 대한 최대 12개월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 시행 중.

■ 문제점

-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완화 및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세자영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함.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현재 제도의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적용제외자(주로 무소득배우자)까지 포함하면 2020년 12월 기준 18~59세 인구의 약 40%에 달하고 있어 보험료 지원을 통한 적극적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필요함.
- 지역 납부재개자에 대한 최대 12개월 지원 사업이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로 국한하고 있음. 사각지대의 가장 많은 부분을 구성하는 적용제외자나 경제적 사유 외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고지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을 배제하고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성실 납부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이 협소한 문제점 이외에도 지원대상 기준소득월액을 납부재개자 평균 인정소득 89.3만원으로 낮게 설정하고, 지원 기간 역시 12개월로 하여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의견 : 국제 기준에 맞는 시범사업 위한 10,217백만 원 증액

-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을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라는 좁은 범위에서 전체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고지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까지 확대
- (지원 기준소득월액 및 지원 기간 확대)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월액 상향(낮게는 농어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수준에서 추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기준까지), 지원 기간 역시 12개월에서 24~36개월로 상향.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확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전출(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 현황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국민연금기금 전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사업내용 : 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 문제점

-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거한 공적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관리운영비 대부분을 가입자들이 조성한 '기금전입금'에 의존, 국민연금 가입자 및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100억 원 정액지원으로 국고부담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1988년~1991년까지 국고전액지원이었으나 지원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부터 100억 원만 지원 중임.
-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였다면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은 기금운용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했을 것임. 2020년 말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한 관리운영비는 총 6조 8,397억 원에 달하며, 1992년부터 2020년 말까지 가입자가 부담한 6조 8,397억 원의 금액을 기금의 연평균 누적수익률인 6.27%로 운용했다면 2020년 말까지 총 11조 9,930억 원의 기금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었음. 만일 이 가입자 부담금 6조 8,397억 원을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른 기금소진연도인 2057년까지 연평균 누적수익률인 6.27%로 운용한다면 약 113조 원이 되어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임.

■ 의견 : 관리운영비 10% 국고 부담 위한 약 450억 원 증액

- 국가사무로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을 높이며, 후세대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리운영비 국고부담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우선적으로 관리운영비의 10%로 국고부담을 확대하고 점차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전출(출산크레딧급여)(8420-842)

■ 현황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국민연금기금 전출 (출산크레딧급여)	-	338	338	525	525

- 사업내용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로 인해 필요한 재원 국가부담(30%).

■ 문제점

- OECD 국가의 출산 크레딧 중 유일하게 둘째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후진성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기간 또한 둘째부터 12개월, 셋째까지 30개월 등 아이 한 명당 4년을 지원하는 스웨덴이나 3년을 지원하는 독일, 2년을 지원하되 아이가 10세에 이르기까지 추가적 지원을 하는 프랑스 등 타국 대비 매우 미흡함.
- 군복무 크레딧 역시 6개월만 지원하며, 지원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100%를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과 달리 A값의 50%만 지원하여 실제 급여 상향효과가 적음.
-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가 많고 20, 50대에 빈번한 실업 상태에 노출되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업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강화할 필요성이 큼.
- 제도 문제 이외에도 재정적 문제의 해소가 필요함. 현 시점에서는 출산크레딧으로 소요되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산입(‘사후 지원’)하며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특성상 출산크레딧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미래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함.
※ 국민연금공단 추계에 따르면 2083년까지 총 199조 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같은 방식으로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에 소요되는 재원은 아직 지급사유가 미 발생한 상황이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미래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함.

■ 의견 :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현실화.
-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 전 기간으로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야 하며 군복무 크레딧 산정시 기준소득월액도 출산크레딧과 유사하도록 제고.
- 실업크레딧 100% 국가 지원,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639-307)

■ 현황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14,723	24,610	24,610	36,625	30,219

■ 문제점

- '20년 기준 노인, 장애인, 보육 사회서비스 예산은 11.4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최소8.7% ~ 최대 23.7% 재정투입 확대. 그러나 '19년 기준 사회서비스 시설 5.9만 개 중 민간운영 88%, 민간위탁 11%, 공공 직영 1%로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비중이 압도적.
-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 절대다수가 국가 및 지자체 예산(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보육-기관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단가)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과의 현격한 질 격차 발생.
- 사회서비스의 공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나 민간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바꾸려 하고 있으며, 각 지역은 타 공공기관과 통합을 하는 등 사회서비스원은 위기에 처해 있음.
-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은 1개소 당 인건비 20명 기준 50%, 사업비는 1개소당 10억 8천만 원 기준으로 3년 미만 50%, 3년 이상 30%만 지원되고 있음.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임. 3년 이상 설립 기관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남에 따라 2023년 예산은 전년대비 7%가 삭감되었음.

■ 의견 : 종합재가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 사업 : 60,950백만 원 증액

-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이를 통한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정부위탁사업 직접 수탁)서비스 제공 확대.

○ 종합재가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 60,950백만원

- 시설비: 200백만원 × 106개소 × 100% = 21,200 백만원

- 인건비: 30명 × 24,000천원 × 106개소 × 50% = 38,160백만원

- 사업·운영비 : 30백만원 × 106개소 × 50% = 1,590백만원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현행 50% → 70% 상향(부대의견 요구).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 현황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장애인활동지원	1,521,619	1,740,523	1,742,549	2,063,126	1,991,879

■ 문제점

-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 장애인활동지원사 2023년 급여 단가는 기본급여 기준 15,570원(국고보조율은 67%)으로 월 기준 환산시 1인당 197만 원으로,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을 고려할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의견 : 급여 단가 증액 20,750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직접 인건비	기본급	2023년 최저임금 9620*130%	12,506원
	주휴수당	기본급/5	2,501원
	연차수당	16일, 평균근속 5년기준	770원
	법정휴일수당	17일 2023년 기준	818원
	직접인건비 소계(A)		
인건비성 경비	국민연금	(A)*4.5%	747원
	건강보험	(A)*3.495%	58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6.135%	36원
	고용보험	(A)*1.45	241원
	산재보험	(A)*0.763	127원
	퇴직금	(A)/12	1,383원
인건비성 경비 소계			3,112원
기관 운영비	순수기관운영비(C)	(A)/80%	1,036원
합계(A)+(B)+(C)		원단위 절상	20,750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급을 생활임금에 근접한 최저임금의 130%로 책정하고 직접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기관운영비를 단가의 80%로 가정할 때 장애인활동지원단가를 20,75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증액해야 함.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해소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영유아보육료 지원(3133-331)/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140-404)

■ 현황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영유아보육료 지원	3,395,239	3,202,771	3,178,111	3,073,282	3,006,888

■ 문제점

- 국공립·법인, 취약보육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2021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고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2023년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 인상하여 교사 기준 월 269만 원 기준으로 편성되었음.
- 전체 보육교사 24만 명 중 71%인 17만 명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90%가 최저임금 수준임. 2021년 보건복지부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를 최소 국공립 인건비 기준표의 1호봉으로 하라는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제한적일 뿐 아니라 권고에 불과하여 현장 적용에 한계가 많음.

■ 의견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공립 인건비 기준 적용, 기관지원금과 인건비 분리

- 2022년 현장 실태 파악 후 필요 예산 산출하여 2023년 예산에 반영.
-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보육료 내 인건비를 포함하여 교부하는 것을 개선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3133-331)’내 인건비성 예산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3140-404)’로 통합하여 편성하고, 어린이집에서 지출할 때에 인건비로만 지출하도록 관리.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02-497-7888, kptu2011@gmail.com)

아이들의 안전한 놀권리를 보장해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확충

■ 현황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어린이집기능보강	6,866	3,859	3,859	3,473	3,473
어린이집 확충	60,881	60,903	60,903	51,787	49,170

- 사업내용:

(어린이집 기능보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기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를 통한 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어린이집 확충)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

(국공립 확충 및 품질관리 지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지원 및 신규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수행.

■ 문제점

<어린이집 기능보강>

-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은 491억 7천만 원이 편성됨. 이 예산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최근 4년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10%가 삭감됨.
- 이 예산은 어린이집 증개축은 4개소, 개보수는 183개소, 장비비는 252개소, 장애아 시설 개보수는 2개소에 불과한 최소화된 수준의 사업량으로 측정된 예산임.
- 정부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시설물에 의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비율 1% 미만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019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비율은 6.2%에 달했고, 그 이후 통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계속해서 삭감되는 기능보강 예산으로 보아 정부가 밝힌 1% 미만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임. 일례로 2021년 발생한 영아, 걸음마, 유아기 어린이 안전사고 12,004건 중 교육시설 발생 건수는 331건으로 약 2.8%를 차지함.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가 필요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21년 공공보육 이용률은 34.3% 수준에 불과함.
- 작년 보건복지부는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씩 늘릴 계획이라 밝혔으나 2023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물량은 33개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물량은 2개소에 불과함.

- 관련 예산은 계속해서 삭감되어 작년 대비 신축 예산은 29.3%나 줄어듦.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600억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임.

■ 의견 : 어린이집 확충, 기능보강 예산 증액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예산 삭감은 정부의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치인 50%를 달성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 가속화되는 저출생 시대에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함.

■ 담당 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고령화 사회를 마주할 준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노인보호전문기관

■ 현황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노인보호 전문기관	10,416	11,535	11,535	15,759	11,919

- 사업내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를 통한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등.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 지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수행.

■ 문제점

- 2023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약 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종사자의 보수 단가 증가에 따른 것임.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학대에 충분히 대응할 수준은 아님.

- 노인학대신고건수는 2017년 13,309건에서 2021년 19,391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감염병에 따른 노인 학대 발생 건수의 증가와 노인 인구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노인보호 예산으로 노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차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됨.

-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최근 4년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음.

■ 의견 : 노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 증액

-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증가한 노인학대건수와 예산 집행률을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함. 전반적인 노인 인구수 증가와 노인학대 증가, 노인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증가 정도를 반영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

■ 담당 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고령화 사회를 마주할 준비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노인요양시설 확충

■ 현황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노인요양시설 확충	104,045	61,990	61,990	70,399	50,053

- 사업내용: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대응한 공립 요양시설 지속적 확충 및 장기요양기관 환경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향상 도모.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을 통해 시설 입소(이용) 노인 인권 보호 및 개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장기요양요원(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교육·건강관리 지원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 문제점

-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약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3% 삭감 됨.
- 공립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기능보강 예산이 약 41억 삭감되었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32개소 신축 예산이 편성되었음. 치매 노인과 비치매 노인의 공공요양기관 접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국고보조율이 80%인데 비해 일반형 노인요양시설의 국고보조율은 50%로,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 또한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기존 6개소에 대한 운영비만 편성되었음.

■ 의견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공립 일반형 노인요양시설 국고보조율을 치매전담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균형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17개 시도에 설치할 예정이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담당 단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 회복·정상화를 위한 국가책임 필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09)

■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3,630,212	1,436,768	4,148,115	950,887	950,887

■ 문제점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대부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었음. 정부는 내년도 이 예산을 2022년 본 예산 대비 33.8%, 추경 대비 77.1% 삭감하였음.
- 공공병원은 지난 3년 간 시민 생명의 보루 역할을 해왔음.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은 전체 병상 대비 9.7%에 불과하지만, 2020년 3월 감염병전담병상의 81.2%를, 2021년 1월 92%를, 2021년 11월 49.8%, 2022년 3월 26.8%를 담당하였음.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 평균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기간은 2022년 3월 31일 기준 약 1년 8개월 20일(629일)이었음.
- 코로나19 진료에만 매진하는 동안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 진료건 수, 수술건 수, 필수진료과 개설율 등은 감소하였고 의료수익은 크게 감소하였음. 2019년과 2020년 사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평균 의료수익은 약 28% 감소했고 2021년에도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지방의료원의 경우 향후 2019년 수준의 병상이용률까지 회복되는 기간이 52개월(4.3년)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음.
- 그간에는 그나마 공공병원들이 손실보상금으로 버텼으나 이제 그런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미 많은 공공병원들이 적자에 허덕이며 회복·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관련 대책도 내놓지 않았으며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음.
- 지난 3년 간 정부의 요구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느라 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의무임. 정부가 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공공병원을 의도적으로 고사시켜 단계적 폐쇄조치를 하려는 것이나 다를바 없는 것임.

■ 의견 : 공공병원 회복·정상화를 위한 예산 신설 또는 손실보상 연장

-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이 기능을 회복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나

서서 충분히 지원해야 함. 이를 위한 예산을 신설하거나 손실보상금 지급기간을 연장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필수의료와 공익적 활동을 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정부가 책임지도록 정책과 예산을 제도화해야 함.

■ 담당 단체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준수 및 지원비율 상황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4931-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7,655,350	8,684,293	8,684,293	10,166,583	9,149,408

■ 문제점

- 올해 말로 일몰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따르면 국가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즉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함.
-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이 일몰되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내년도 국고지원도 예상수입액 대비 일반회계에서 12.0%,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4% 도합 14.4%만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는 20%와 비교하면 무려 4조6,662억 원을 덜 편성한 것이며, 일반회계만 따져도 1조5,236억 원을 덜 편성한 것임.
- 이처럼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음. 예컨대 '수원세 모녀'는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1만6천 원 넘게 내야 했고 이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음. 이처럼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올해 6월 기준 67만3000 가구나 됨.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보험료율을 올려 7%를 초과하게 만들었음.
-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프랑스는 50%가 넘고 가까운 일본도 39%이며 대만은 국고 지원을 36%를 법제화했음. 이에 비해 한국은 12%에 불과함. 이처럼 한국의 국고 지원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만큼 서민들의 부담은 높은 상황임.
-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지출개혁을 하겠다고 함. 예컨대 비급여를 급여화함에 따라 과다이용이 발생했다며, 뇌·뇌혈관 MRI에 목표대비 476억 원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186억 원이 초과지출됐다고 했음. 정부가 수조 원을 미납하면서 그것의 몇 %도 안 되는 환자들의 치료비 보장을 줄이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임. 정부는 국고지원 책임을 다해 감염병과 경제위기 시기 절실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해야 함.

■ 의견 : 건강보험 국고 부담액 대폭 증액

-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부담액을 늘려야 함.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전체 건강보험료의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증액해야 함.
- 국회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고 부담액을 상향하여 항구적 법제화해야 함.

■ 담당 단체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의료 마이데이터,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중단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비대면 진료기술개발(R&D)	-	-	-	5,550	5,550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R&D)	-	-	-	9,750	9,750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	-	-	-	7,500	7,500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운영(정보화)	4,996	14,071	14,071	9,694	9,694

■ 문제점

-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원,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에는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거나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등을 전액 삭감하는 등 복지예산은 쥐어짜는 반면에, 기업들을 의료로 돈벌이하게 만드는 의료민영화 예산은 늘렸음.
- '의료 마이데이터'라고 정부가 부르는 사업은 건강보험 공단 등에 축적된 개인정보,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수집된 건강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 등을 한 데 모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들겠다는 플랫폼임. 건강 정보를 넘기는 것이 가져올 손해를 정확히 따져보기 힘든 개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쉽게 이러한 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길 수 있는 창구를 국가가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 주는 것임. 기업들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종 상업적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개인들은 정보인권 침해의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예컨대 '토스' 사태처럼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팔아 돈벌이를 할 수도 있음. 또 이런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의료보험사에 의료행위를 허용해주는 의료민영화인 '건강관리서비스'에 활용될 것임.
- 원격의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으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다는 명목과 달리 현실에서는 이와 관련 없는 온갖 상업적 플랫폼이 난립하고 있으며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한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영리기업이 플랫폼으로 의료에 침투해 돈벌이 하는 시장을 열어주는 결과 이상이 될 수 없음. '디지털헬스'라는 이름의 사업도 대체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들을 손쉽게 허가해주는 규제완화·민영화 성격이 짙음.

■ 의견 : 의료민영화 예산 전액 삭감

- 의료공공성을 저해할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확대와 의료공공성 강화에 써야 함.

■ 담당 단체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 신중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운영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운영	-	-	-	10,236	6,271

- 사업내용: 보건 의료 정보화 전문기관 운영 및 인건비 지원

■ 문제점

- 2019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한국보건 의료원은 보건복지부 등 사업을 위탁 운영하며 2022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정원 110명 중 7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을 요청했으나 한국보건 의료원은 보건복지부 등에서 462억원 가량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수행함. 주요 업무는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및 EMR 제품인증심사 등임.
- 해당 기관 요청은 지원을 시작하면 자연증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건비 및 운영비임. 실제 사업 내역과 재무운영 현황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을 신중히 결정해야 함.

2023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백만 원)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0	○ 신규사업	6,271	① 인건비 : (22) 0백만원 → (23) 5,330백만원(신규) ② 운영비 : (22) 0백만원 → (23) 941백만원(신규) ○ 기관 운영비 : (22) 0백만원 → (23) 941백만원 - 사무공간 임차 : (22) 0백만원 → (23) 435백만원 * 기관 사무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 - 이사회 운영 등 : (22) 0백만원 → (23) 32백만원 * 이사회 진행비(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 인사노무관리 및 교육, 훈련 운영 : (22) 0백만원 → (23) 191백만원 * 채용, 각종 자문(세무, 법무, 노무) 및 노사협의회 운영, 각종 교육 등 - 중장기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 (22) 0백만원 → (23) 80백만원 * 중장기 발전 방향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 일반운영 : (22) 0백만원 → (23) 203백만원 * 기관 정원 110명 기준의 여비, 특근매식비, 대내외 업무추진비, 도서 및 각종 간행물 구독, 사무용품 구입 등

■ 의견 : 삭감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요청으로 사업내용과 재무운영 현황 등을 점검해 신중한 지원 필요.

■ 담당 단체 :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인허가 심사지원 등 : 수입대체경비로 묶인 안전관리 인건비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 현황

세입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	25,099	39,879	39,879	26,551	26,551

세출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인허가 심사지원 등 (수입대체경비)	16,905	21,904	21,904	21,461	21,461

- 사업내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수수료를 허가심사 지원 인력을 확보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여 허가심사 서비스의 신속화, 다양화, 전문화 추진 / 수익자 부담원칙에 해당하는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도모.

■ 문제점

- 2020년 의약품 허가 심사료를 30% 가량 인상하였지만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못함. 이로 인해 매년 증가하던 인허가 심사지원 내년 예산이 삭감되었음.
- 한국은 과거부터 의료제품 심사인력의 부족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FDA의 심사인력 8,000명, 유럽 의약품청의 심사인력은 4,000명에 달하지만 한국의 의료제품 심사인력은 305명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심사관의 평균 근속연수는 3년에 불과함.

■ 의견 : 인허가 심사지원을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을 통한 200억 원 증액

- 바이오헬스 관련 허가심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허가 관련 규제완화 조치로 신속심사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심사인력을 2배 이상 증대해야 함.
- 허가수수료 수입내에서 심사인력을 운영하기에는 심사인력 증대가 힘든 상황임.

■ 담당 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 코로나19 신속개발을 위해 마련된 중앙심사위원회 운영 이제 그만둬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1,385	3,060	3,060	2,075	2,075

- 사업내용: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운영 및 임상정보 관리

■ 문제점

- 코로나19 관련 의료제품 신속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 기관 임상시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했지만 2023년에 감염병위기 대응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개발을 위한 지원기관의 축소운영이 불가피함. 그럼에도 관련 운영비 지출은 삭감하지 않음.
- 2011년 한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은 503건에 불과했음.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1년은 842건에 달함. 임상시험이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안전관리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의견 :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6억 원 삭감

- 코로나19 의료제품 신속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예산을 삭감해야.
- 반면, 증가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약회사들이 매년 제출하는 정기적 안전성 정보 보고 분석 예산을 2배 이상 인상해야.

■ 담당 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마련해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모자보건사업 (성·생식건강 증진)	42,026 (1,023)	12,663 (1,023)	12,663 (1,023)	14,483 (-)	13,396 (923)

- 사업내용: (성·생식건강 증진) 원치않는 임신 등을 예방하고, 계획 임신을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하여 성·피임 교육 및 홍보실시, 위기임시 전문상담센터 운영.

■ 문제점

- 2020년 12월 31일 이후, 낙태죄가 소멸되고 임신중지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병원을 찾는 심리적 장벽은 낮아짐. 하지만, 정부는 관련하여 임신중절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이외에 특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제공 포털사이트는 홍보도 잘 되고,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제공은 미온적임. 오로지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실태조사 등 통계적 접근에만 머물러 있음.

■ 의견 : 성·생식건강 증진 관련 예산 10억 원 증액 (관련 예산 2배로 증액)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산하 상담조직들이 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직접 요청하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 온라인을 통해 여성 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정보제공사업을 확대 제공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예산을 증액해야.

■ 담당 단체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환경노동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고용노동부	증액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공공운수노조	61
고용노동부	증액	청년고용률 성과지표 개선	나라살림연구소	62
고용노동부	증액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	나라살림연구소	63
환경부	증액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환경운동연합	64
환경부	증액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환경운동연합	65
환경부	증액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환경운동연합	66
환경부	증액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환경운동연합	67
환경부	삭감	금호강 명품 하천 조성	환경운동연합	68

고용보험·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231-300)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810,347	1,046.594	1,046.594	1,076,405	1,076,405

■ 문제점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열악한 노동자들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해 왔음.
- 2012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연금 수급권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경우, 전체 분석대상 중 10.5%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하지만 2018년 이후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축소하고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노동자(신규노동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 이에 따라 입·퇴사를 반복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노동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
- 2023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 120%에서 최저임금 130%로 일부 상향하였으나 지원 대상 사업장과 지원 기간은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음.

■ 의견 : 소규모 저임금 노동자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

- 지원 대상 사업장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지원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kptu2011@gmail.com)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률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 현황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③청년고용률 (%)	목표	-	-	신규	42.5	43.0	최근 5년간의 청년고용률 평균값 +0.1%을 목표로 설정	고용률(%)=(청년취업자/ 청년총 인구)×100	3만5천가구 표본조사 (가구추출률 0.3%)/통계 청
	실적	-	-	신규	-	-			
	달성 도	-	-	-	-	-			

- 고용노동부 주요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은 위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를 사용하며, 청년 고용률 2023년 목표를 43.0%를 설정하고 있음.

■ 문제점

- 고용노동 청년은 만 15~34세 기준을 대상으로 2023년 청년고용률 43.0%를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 e-나라지표 청년 고용동향 15~29세는 2021년 12월~2022년 9월까지 월별청년고용률이 45.1%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음.
- 2021년 12월 30일 관계부처합동 「최근 고용상황 및 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에서 “청년 중심 고용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모든 연령대 고용률 4개월 연속 상승, 청년은 인국감소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이상 취업자 증가 지속, 30대·40대 취업자는 감소하였으나 인구를 고려한 고용률은 상승”하였음(자료 출처 : 관계부처합동, 「최근 고용상황 및 2022년도 고용정책 과제」, 2021년 12월 30일).

■ 의견 : 고용노동부 주요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청년고용률 성과지표 검토가 필요함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률은 “최근 5년간의 청년고용률 평균값 +0.1%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하는데, 이 기간에는 코로나19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함이 낮으며, 또한 코로나19 완화로 정부 직접지원 축소를 줄이는 상황의 청년고용률 정책목표를 달성함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것은 타당성이 낮음.

■ 담당 단체 :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정부 직접지원 축소는 불합리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맞춤형 지원

■ 현황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	-	5.4조 원	-	-	4.3조 원

-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중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 (일자리) 첨단분야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 강화(5.4→4.3조 원).
- 청년대상 고용장려금(2022년부터 신규 지원 중단) 등 한시사업 제외시 3.8→4.0조 원.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2022년 8월.

■ 문제점

- 2023년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의 특징은 코로나19 완화에 따라서 정부 직접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특징이며, 코로나19 완화로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가짐.
- 코로나19 완화에 따라서 정부 직접지원 축소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국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직접지원을 축소하는 것과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경제 상황에 따라서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의 정책 효과를 낮출 수 있음.
- 한국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는 어려운 측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코로나19 완화만을 고려한 2023년 예산안 중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은 점검이 필요함.

■ 의견 :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 중 정부 직접지원 유지

- 2023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국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중 정부 직접지원을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담당 단체 :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예산 없어 제자리걸음

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1831-304)

■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22,208	22,346	△170	37,444	27,895
생태계서비스지불제	2,094	2,754			4,238

- 사업내용 : 토지 소유자 등이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보전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

■ 문제점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자연자산을 유지·관리하고, 경작방식을 변경하는 등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증진·보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임. 민간의 참여로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증진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되는 의의가 있음.
- 현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낮은 국비보조율로 인해 적극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22년 신청금액 47억 대비 예산 반영비율은 23억(49.7%)에 불과함. 특히 철원 등 DMZ지역은 생태계보전 강화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확대가 필요하나, 낮은 국비 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주로 농경지가 많고, 개발이 덜 이루어진 시·군이 중심임.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음.(철원 12.78%, 해남 11.85%, 서천 12.58%, 부안 15%, 진도 12.45%)
- 2021년 행안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결과를 통해서도 세부사업(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내 내역사업의 기준보조율 보다 낮아 보조율 상향 의결된 바 있음.
- 타부처 지불제와 비교해도 보조율의 현실화가 필요함.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100%, 농림부 공익형직불제 100%, 해수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80%의 보조율을 보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역시 향후 50%, 100%로 상향하는 방향이 필요함.

■ 의견 : 대폭 증액

-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정착을 위한 대폭증액이 필요.

■ 담당 단체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심각성 고려한 예산 편성해야

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1133-306)

■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31,121	71,181	70,980	122,308	84,856
녹조모니터링 및 연구	4,211	4,264			4,281
녹조예방 및 오염원관리	4,288	3,855			3,760
비점오염원관리	16,466	18,133			23,215
취양수시설개선	5,596	44,929			53,600

- 사업내용 :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녹조현상 모니터링 및 연구사업 수행, 오염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녹조(수질)개선 대책마련 및 댐 상류 등 녹조우심지역(지류·지천)에 대한 오염원 관리체계를 마련, 비점오염원 관리,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취·양수장, 친수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

■ 문제점

-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낙동강 각 구간이 호소화되며 녹조의 위협에 취약해짐. 시민단체를 통해 낙동강 농수산물, 수돗물, 공기 중 에어로졸의 형태로 녹조 독소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이 밝혀짐. 조류경보 및 모니터링 개선을 위한 노력과 오염원 관리 및 하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원수 수질 관리, 새롭게 대두되는 조류독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최우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취양수시설개선 사업은 극한 가뭄, 녹조·수질 사고 시에도 안정적 물 서비스 제공, 취수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보 영향 구간 내 취·양수시설 개선하는 사업임. 현재 대부분의 취·양수시설이 하천 최저수위보다 높아 하천수위 저하시 급수중단의 우려가 있음. 한강·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이 '26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예산 증액을 통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 의견 : 환경부 요구안 반영, 1,223억 8백만 원으로 증액

- 요구 예산 반영, 계획기간 내 사업 완결되도록 노력 필요.

■ 담당 단체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내실 있는 모니터링 이루어져야

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1133-304)

■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78,460	81,357	80,610	83,691	68,221

- 사업내용 : 4대강 보 구간의 수생태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 모니터링

■ 문제점

-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4대강 보 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22년 4대강조사평가단의 해체에 따라 조사평가단 운영경비 감액 등을 반영해 예산이 조정됨.
- 그러나 기후위기에 따라 녹조위험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임. 녹조 독소 오염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고려해 4대강 보 구간의 모니터링은 더욱 자세히 이뤄져야 함.

■ 의견 : 4대강 보 모니터링 관련 예산 56억 증액

- 4대강조사평가단 해체로 인한 조사평가단 운영경비 감액분은 모니터링 관련 인력 확충 등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전환.

■ 담당 단체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 예산 반영 필요

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1133-326)

■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10,536	7,500		6,750	6,000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	8,000	4,000			2,500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	1058	2,000			2,000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원인 진단	1478	1,500			1,500

- 사업내용 : 하천 내 횡단구조물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수생태계 훼손의 원인에 대한 조사평가를 통한 사업 기초자료 확보,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을 통한 수질개선, 수생생물 이동통로 확보, 흐름 회복 등을 위해 용도 상실 후 방치된 횡단구조물 개선 및 철거

■ 문제점

- 보와 댐을 비롯한 하천 구조물은 하천의 연결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임. 자연스러운 하천의 흐름을 가로막아 수생생물의 이동을 방해하고, 수질오염을 유발함.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의 보는 34,000여개임. 지류·지천의 길이 대비 횡단구조물 수는 km당 약 1.2개 수준임. 이는 다른 EU의 주요 국가(독일, 0.5개/km)에 비해서도 많은 수치임. 현재 용도 상실, 파손 등의 이유로 폐기 처리되어있는 보의 숫자는 약 4,000개에 달함.
- 전 세계적인 하천 건강성 훼손으로 담수 생물의 개체 수는 가파르게 하락 중임. 환경부의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은 민물 생태계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 사업 지연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임. 그렇다고 예산을 줄여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시범사업 3년 차인 '23년 예산을 줄여 '22년보다 4개소 축소된 8개소의 철거계획을 세운 것은 시급성에 비해 안이한 수준임.
- 생태계 복원과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함

■ 의견 : 환경부 요구안 반영, 67억 5천만 원으로 증액

■ 담당 단체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금호강 르네상스, 인간중심 하천을 위한 시대착오적 예산

환경부 / 일반회계 /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5331-307)

■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신규)	-	-	-	-	2,000

- 사업내용 : 국민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인근 하천의 친수·문화기능 강화와 대규모 하천 복합친수공간 조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 추진.

■ 문제점

-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사업은 금호강 일대를 개발해 수상·수변관광지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대구시의 하천개발 사업임. 하지만 금호강을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설명과 달리, 세부 내용은 인간의 편의만을 위한 개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세부 추진 항목인 동촌유원지 명품하천 조성사업,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금호강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예정지는 이미 과도한 개발이 진행된 곳으로 개발이 아닌 복원이 필요함. 본 사업 추진으로 달성습지와 안심습지, 반야월 습지 등 다양한 생물의 터전인 습지 환경이 개발 위험에 처하는 등 친환경이 아닌 반환경 사업이 될 위험이 있음.
- 또한 사업내용 중 이미 산책로가 조성된 구간이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 면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의견 : 전액 삭감

- 사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담당 단체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국토교통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국토교통부	증액	PSO 보상	공공운수노조	70
국토교통부	증액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및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	공공운수노조	71
국토교통부	증액	공공임대주택 지원	참여연대	72
국토교통부	증액	다가구매입임대(용자)	나라살림연구소	74
국토교통부	증액	전세임대(용자)	나라살림연구소	75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 보조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PSO보상 (2736-30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PSO보상	379,561	384,474	384,474	426,902	397,896

■ 문제점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5개년 누적 적자액이 6조 8,1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며, 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운수 수입 급감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증가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가 가중되는 형편임.
- *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대비 '20년도 당기순손실 70%(7,480억 원) 증가 및 '19년도 대비 '21년도 당기순손실 70%(7,529억 원) 증가 예상.
- 도시철도 개통 후 30년 이상이 경과(서울, 부산 등)된 노후 전동차와 노후 시설물 개량을 위해 막대한 재투자 비용이 소요되는데 제때 투자를 하지 못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노후 전동차 및 노후 시설물 교체를 위해 4조 6,237억 원 ('21~'25년 연평균 9,247억 원) 투입 예정.
- 정부의 정책과 법령에 따라 '84년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승차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이후 국가유공자('85년), 장애인('91년) 등으로 확대되었음.
- * 법 시행 초기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9%에 불과해서 운영기관의 부담을 주지 않았으나 '20년 기준 15.7%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무임승차 인원이 늘면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근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5,539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있음.
- * 노인 인구 비중 : '80년 5.9% ⇨ '20년 15.7% ⇨ '25년 20.3% ⇨ '30년 25.0%.

■ 의견 :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액 국고 지원

- 현재 철도공사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국고 지원 대상을 도시철도로 확대.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kptu2011@gmail.com)

도시철도 노후 시설·차량 개선 지원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3031-332),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3031-351)

■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도시철도노후 시설개선지원	52,041	53,402	53,402	110,397	74,854
도시철도노후 차량개선지원	94,359	91,168	91,168	65,920	65,920

■ 문제점

- 무임수송 손실, 원가에 못미치는 운임 등으로 누적된 적자와 코로나19로 심각한 재정위기 봉착 → '20년까지 누적 적자 16조 684억 원.
- 최근 4년간 노후시설 등 투자필요액은 1조 3,865억 원이었으나 투자재원 확보 실패로 6,200억 원(약 44% 수준)만 투자. 그 중 국비는 1,380억 원으로 총소요금액의 10% 수준임.
- 시설물 성능평가 결과 위험수준인 C·D등급 비율 증가 추세('18년 평가기준).
- (1~4호선) 73.8%, (5~8호선) 62.2% → 현시점 성능 재평가지 시설 노후도 더욱 심화.
- 향후 1조 6,942억 원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나 투자비 확보 불가로 개선물량 축소 및 사용기간 억지연장 ⇨ 시민 안전위협.

■ 의견 : 국비지원을 상향, 지원 대상 확대

-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 사업 : 국비지원을 30% → 50% 상향, 지원 대상 확대. 국민 안전에 직결된 궤도·건축·구조물 분야 추가.
- 도시철도노후차량개선지원 사업 : 국비지원을 25%/30% → 40% 상향.

■ 담당 단체 :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kptu2011@gmail.com)

늘려도 모자라는 공공임대예산 5조 7천억 원 삭감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공공임대주택지원(1333)

■ 현황

-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2년 22조 1,381억 원에서 '23년 16조 8,836억 원으로 5조 2,545억 원(23.7%) 삭감함.

(단위 : 억 원)

구분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국민임대	10,919	9,319	5,193	5,193
영구임대	3,064	2,464	1,797	1,797
행복주택	27,141	25,441	16,887	16,887
통합공공임대	18,231	18,231	23,005	22,604
공공임대(분양)용자	19,705	19,705	18,968	18,968
다가구매입임대	91,560	91,560	66,216	60,763
임대주택리츠	3,356	3,356	4,221	4,221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	4,806	4,806	2,420	2,046
전세임대	46,500	46,500	37,172	36,357
합계	225,281	221,381	175,879	168,836

■ 문제점

-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지난 8월 폭우 참사로 인해 기후재난에 내몰린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오히려 대폭 삭감함.
-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국민임대, 영구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22년 15조 4,648억 원에서 23년 10조 6,156억 원으로 약 5조 원을 삭감함. 또한 중위소득 이상 입주 가능한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용자, 임대주택리츠 예산도 22년 6조 6,732억 원에서 23년 6조 2,680억 원으로 4,052억 원으로 삭감함.
- 기획재정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예산이 1조 7천억 원 감액된 이유가 통합공공임대로 유형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으나, 통합공공임대 예산 증액분은 4천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함. 반면, 공공분양주택 예산 및 주택구입·전세자금·이차보전 등의 예산을 '22년 10조 2천억 원에서 '23년 13조2천억 원으로 2조9천억 원 늘림. 공공임대주택 예산에서 깎은 5조 2,545억 원 중 일부를 돌려 분양주택 용자, 대출 지원 등에 더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임.

■ 의견 : 공공임대예산 증액

-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대폭 확충하여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함.

■ 담당 단체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반지하 찾아 대책 마련하더니 관련 예산 44% 삭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다가구매입임대(용자)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용자금	5,655,550	5,809,250	5,809,250	3,571,500	3,237,000

- 사업내용: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다가구 주택 등 매입-임대 사업.

■ 문제점

- 2021년 5.7조 원, 2022.5.8조 원에서 2023년 3.2조 원으로 전년대비 44% 삭감.
- 전년도 산출내역과 비교해보면 일부 지원 단가를 인상하기는 했으나 수도권(1.4조 원), 비 수도권(0.4조 원) 공공전세 사업이 전액 삭감됨. 신혼부부 대상 사업은 1.6만호에서 7,500호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다자녀, 기숙사 대상 사업도 각각 700호, 500호 감소함.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신림동 반지하 침수' 현장을 찾아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으나 실정은 전년대비 44% 삭감으로 나타남.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2년 예산		'23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809,250	○ 다가구매입임대 용자(1336-401) : 5,809,250 • (일반) 525,000백만원 = 7.5천호 × 140백만원/호 × 50% • (취약) 140,000백만원 = 2천호 × 140백만원/호 × 50% • (청년역세권) 480,000백만원 = 6천호 × 160백만원/호 × 50% • (리모델링 I) 47,500백만원 = 1천호 × 95백만원/호 × 50% • (다자녀 리모델링) 34,500백만원 = 3백호 × 230백만원/호 × 50% • (일반 리모델링) 100,000백만원 = 1천호 × 200백만원/호 × 50% • (고령자 리모델링) 75,000백만원 = 1천호 × 150백만원/호 × 50% • (리모델링 II) 600,000백만원 = 6천호 × 200백만원/호 × 50% • (신혼부부 I) 935,000백만원 = 1,1만호 × 170백만원/호 × 50% • (신혼부부 II) 750,000백만원 = 5천호 × 300백만원/호 × 50% • (커뮤니티시설) 9,000백만원 = 45호 × 400백만원/호 × 50% • (다자녀) 144,500백만원 = 1.7천호 × 170백만원/호 × 50% • (기숙사) 112,500백만원 = 1.5천호 × 150백만원/호 × 50% • (공공전세_수도권) 1,462,500백만원 = 6,500호 × 140백만원/호 × 50% • (공공전세_비수도권) 393,750백만원 = 2,500호 × 150백만원/호 × 50%	3,237,000	○ 다가구매입임대 용자(1336-401) : 3,237,000 • (일반) 600,000백만원 = 7,500호 × 160백만원 × 50% • (취약) 160,000백만원 = 2,000호 × 160백만원 × 50% • (청년역세권) 720,000백만원 = 9,000호 × 160백만원 × 50% • (다자녀 리모델링) 65,000백만원 = 500호 × 230백만원 × 50% • (일반 리모델링) 57,500백만원 = 500호 × 230백만원 × 50% • (고령자 및 고령자 리모델링) 160,000백만원 = 2,000호 × 160백만원 × 50% • (리모델링 I) 63,000백만원 = 1,200호 × 105백만원 × 50% • (리모델링 II) 280,000백만원 = 2,800호 × 200백만원 × 50% • (신혼부부 I) 550,000백만원 = 5,500호 × 200백만원 × 50% • (신혼부부 II) 300,000백만원 = 2,000호 × 300백만원 × 50% • (커뮤니티시설) 134,000백만원 = 670개소 × 400백만원 × 50% • (다자녀) 97,500백만원 = 1,000호 × 195백만원 × 50% • (기숙사) 75,000백만원 = 1,000호 × 150백만원 × 50%

■ 의견 : 증액

- 기초생활수급자, 쪽방 거주자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 및 취약계층 대상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급격한 감소는 해당 수혜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 담당 단체 :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주거취약계층 지원 축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세임대(용자)

■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전세임대(용자)	4,812,750	4,532,791	4,532,791	3,586,800	3,511,950

- 사업내용: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 문제점

- 기존 주택 소유자와 공공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장애인 등임.
- 당국은 공급물량 확대 및 지원한도 현실화 등을 감안했다고 하나 현실은 공급물량 축소임.
- 신규 물량은 신혼부부 대상 사업이 1.3만호에서 7,500호로 5,500호로 감소폭이 가장 큼. 재계약 물량은 청년은 기존 물량 유지, 신혼부부는 4,710호로 가장 많은 물량 감소.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단위: 백만 원)

'22년 예산		'23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366,250	○ 전세임대용자(1337-401) : 4,532,791백만원 <신규> • (일반) 1,079,000백만원 = 13,000호 × 83백만원 × 100% • (고령자) 249,000백만원 = 3,000호 × 83백만원 × 100% • (다자녀) 306,000백만원 = 3,000호 × 102백만원 × 100% • (신혼부부) 598,500백만원 = 7,000호 × 90백만원 × 95% • (신혼부부II) 816,000백만원 = 6,000호 × 170백만원 × 80% • (청년역세권) 484,500백만원 = 6,000호 × 85백만원 × 95% • (청년세어형) 415,625백만원 = 3,500호 × 125백만원 × 95% <재계약> • (일반·고령자) 332,328백만원 = 83,082호 × 4백만원 × 100% • (다자녀) 17,342백만원 = 754호 × 23백만원 × 100% • (신혼부부) 115,830백만원 = 20,321호 × 6백만원 × 95% • (청년) 118,666백만원 = 15,614호 × 8백만원 × 95%	3,586,800	○ 전세임대용자(1337-401) : 3,586,800백만원 <신규> • (일반) 906,750백만원 = 9,750호 × 93백만원 × 100% • (고령자) 279,000백만원 = 3,000호 × 93백만원 × 100% • (다자녀) 274,500백만원 = 2,250호 × 122백만원 × 100% • (신혼부부) 570,000백만원 = 6,000호 × 100백만원 × 95% • (신혼부부II) 207,600백만원 = 1,500호 × 173백만원 × 80% • (청년역세권) 423,938백만원 = 5,250호 × 85백만원 × 95% • (청년세어형) 267,188백만원 = 2,250호 × 125백만원 × 95% <재계약> • (일반·고령자) 350,084백만원 = 87,521호 × 4백만원 × 100% • (다자녀) 28,842백만원 = 1,254호 × 23백만원 × 100% • (신혼부부) 88,983백만원 = 15,611호 × 6백만원 × 95% • (청년) 118,666백만원 = 15,614호 × 8백만원 × 95%

■ 의견 : 증액

- 금리 인상 등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열악한 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 필요.
- 신규 및 재계약 물량 확보를 통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필요.

■ 담당 단체 :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교육위원회

부서	의견	사업	작성자	쪽
교육부	관리	지방재정교부금	나라살림연구소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적인 집행 필요

교육부, 일반회계

■ 현황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2023년	
		본예산	추경	요구안	정부안
보통교부금	57,916,398	63,217,987	73,855,414	76,415,700	75,053,361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503,819	552,465	656,863	668,167	668,167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67,940	184,155	218,954	222,722	222,722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07,639	1,104,930	1,313,725	1,336,333	1,336,33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전출되는 항목임. 내국세의 20.79% 중, 97%는 보통교부금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3%는 특별교부금으로 배분됨. (3%가 배분되는 특별교부금 총액의 60%는 국가시책특별교부금, 30%는 지역현안특별교부금, 10%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배분됨)

■ 문제점

- 2023년도 내국세 수입 예상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배분으로 내국세가 늘어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나게 됨. 2022년에 비해 18.7% 증가한 11조 8354억 원이 늘어남. 행정적 필요, 국민적 합의, 정치적 결단 등에 따라 예산 지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적 비율이 지출 될 때, 우연히 사회적 최적수준 만큼 공급될 수는 없음.
- 교육청의 보유재원은 시·도교육청 연도말 보유재원은 2017년 2조 577억 원에서 2021년 6조 6,356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2조577억 원에서 2021년 1조 7,721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누적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면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쌓이고 있음.

■ 의견 :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필요

-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담당 단체 :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시 민 의 관 점 으 로 분 석 하 는 2 0 2 3 년 나 라 예 산 토 론 회